대한민국 희망로드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

〈2〉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前 재무부 장관)

여전하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정이 넘친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75·전 재무부 장관) 이야기다. 일흔 중반이란 나이가 믿어지지 않는다. 무역센터에 있는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실은 책으로 꽉 찼다. "나만큼 공부하는 사람 없을 거야. 죽는 날까지 공부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덧붙인다.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88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92세에도 공부해." 하루 2~3시간은 꼬박 책이나 보고서를 읽는다고 했다. 세상 흐름을 놓치기 않기 위해서다. 그의 주장은 명쾌하다. 그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판 잃어버린 20년, 나아가 잃어버린 50년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가 보기에 일본을 저 꼴로 만든 건 고령화보다 정책실패가 더 큰 원인이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나라는 이사를 갈 수 없다"는 말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파이낸셜뉴스 창간 15주년을 맞아 지난 19일 서울 영동대로 무역센터 내 세계경제연구원에서 사공 이사장을 만났다.

"정치판 지금처럼 돌아가면 잃어버린 50년 올 수 있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재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영동대로 무역센터 내 세계경제연구원에서 본지 창간 15주년을 기념, 곽인찬 논설실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경제 문제부터 국내 정치·외교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화가 이뤄졌다. 사진=박범준 기자

대담 = 곽인찬 논설실장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하강이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5%로 내렸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처방전을 어떻게 보나.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언론이 초점을 제대로 못 맞췄다고 본다. 한은이 금리를 내렸으니 이제는 공이 정부로 넘어가 추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은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국회로도 넘어갔다고 해야 맞다. 메르스 사태에 대응해 예산편성 등 단기적인 조치는 취해야겠지만 추경은 단기대책이 될지 몰라도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 금리인하가 효과를 내려면 국회가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투자를 일으키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

-위기 때 말고는 근래 한국 경제에 2%대 성장은 없었다. 국민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메르스 사태로 성장률이 2%대로 내려갈 것으로 생각된다. 난 2%대 성장은 갈 길이 먼 우리로선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긴 안목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해나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중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늘릴 법안이 얼마나 많은가. 다시 말하지만 우린 아직 갈 길이 먼 나라다. 2% 성장이 말이나 되는가. 미국같이 경제가 성숙된 나라도 4% 성장을 하고, 일본 아베노믹스의 목표도 2% 성장이다. 일부에선 고도성장은 옛날 얘기고, 이제는 한국 경제가 성숙돼 예전과 같은 성장세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미국 경제는 성숙하지 않아서 4%대 성장을 목표로 하는가.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지금 규제개혁이 잘 되고 있나.

▲규제개혁이나 투자여건 개선은 우리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추경은 돈이 든다.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약 3.5%로 추계되지만 이대로 있다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과 정치권의 협조만 있다면 잠재성장률을 1.5%포인트는 충분히 끌어올려 5%로 만들 수 있다. 아베노믹스는 성장잠재력 목표를 2%에 맞췄다. 현재 0.5% 수준에서 몇 년 안에 1.5%포인트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거다. 한국 경제보다 더 성숙한 일본이 한다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있나.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판 잃어버린 20년'의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국 경제는 결국 일본을 따르가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노령화나 인구구조 변화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더 큰 원인은 정치에 있다. 정치적 리더십 부재로 인한 정책실패가 잃어버린 20년을 불렀다. 지금 국내 정치판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 역시 정책실패가 예상된다. 한국판 잃어버린 20년은 물론 잃어버린 50년도 올 수 있다.

국회가 제 역할 해야

2%대 성장은 충격적인 사건
추경은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
경제활성화법부터 처리해야
정치권 협조하면 5%도 성장

사회 구조개혁도 시급

노동시장 경직에 청년들 피해
법인세 올리면 기업들 해외로
공교육 바로세우는 개혁 필요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을

-아베노믹스는 성공인가 실패인가.

▲아베 총리가 과연 신념을 가지고 인기 없는 개혁을 추진할 정치 지도자인가에 대해 처음엔 다소 회의적으로 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절반은 성공했다고 본다. 일본 경제는 지난 20년에 걸친 불황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바닥까지 꺼질 것 같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확 달라졌다. 일본 사람들을 만나보면 안다. 일본 경제가 잘 안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그 엔진이 작동하면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도 긍정적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기성세대는 뭘 해야 하나.

▲고용의 질이 악화됐다. 임시직이 늘고 그 자리를 청년들이 메우고 있다. 이는 교육개혁, 노동경직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독일은 사민당 슈뢰더 정권 때 '어젠다 2010'이란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핵심은 노동시장 유연화다. 현재 독일의 낮은 실업률은 올바른 교육체계와 노동개혁을 단행한 덕분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조는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경직되면 전체 노동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청년과 비노조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강성 노조는 기업투자를 막고 일자리를 외국으로 쫓아내는 부작용을 낳는다.

-노사정 대타협 방식으로 구조개혁이 될 수 있나.

▲최근 방한한 슈뢰더 총리는 "노동개혁에 성공하려면 집권세력이 정권을 잃더라도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용기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도 노사정 타협에 실패했다. 결국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아들딸들이 일자리를 갖기 어렵고, 가져봐야 임시직밖에 갖지 못한다는 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야당은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세율을 올려야 하나.

▲정상화라니, 뭐를 정상화한다는 건가. 정상화라는 말을 쓰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지금은 기업의 입지가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시대다. 기업들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로 쉽게 공장을 옮긴다. 무조건 세율을 올리는 게 정상화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성찰이 이어졌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하다고 보나.

▲역사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을 선언했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완벽하지 않고,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사실 소득격차·양극화 등은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세계화의 가속화와 지식기반경제 심화라는 두 가지 큰 물결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부모가 고소득층이면 더 좋은 사교육을 받는다. 코흘리개 때부터 전부 사교육 시장으로, 외국으로 내보내질 않나. 똑같이 머리 좋은 아이라면 누가 더 유리하겠는가. 교육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득불평등은 세대를 거쳐 계속 악화될 것이다. 공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 교육개혁이야말로 지금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다.

-메르스 사태의 원인이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행정의 비능률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큰 요인 중 하나다. 사무관들이 자기 국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 않나. 전부 길 위에 있으니…. 이래서는 정부 조직이 제대로 가동될 수 없다. 횡적·종적으로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무관이 기안을 올려 과장, 국장이 고친다는 건 단어 하나, 자구 수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행간에 의미를 담아 서로의 생각을 전하는 과정이다. 사무관이 그 뜻을 잘 이해하고 자기 확신을 가지면 다른 과와 협력하고, 나아가 부처 간 협조체제도 만들어진다. 국회 전체가 세종시로 내려가든, 아니면 국회 상임위가 내려가든 뭔가 방안을 찾아야 한다.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과연 앞으로 한국에 적합한 체제인가. 개헌에 대한 생각은.

▲5년 단임제는 어중간하다. 미국과 같이 4년 중임 대통령 책임제가 좋다. 또 소선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 그래야 지역감등을 푸는 데도 도움이 된다.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에 찬성이다.

-최근 인사청문회는 부작용이 너무 심한 것 같다.

▲인사청문회는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같은 청문회는 안 된다.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정책능력과 자질을 묻고 답하는 정책 청문회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개인 신상을 놓고 사회적으로 난도질해서 파렴치범을 만들어 폐기처분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됐다. 개인의 신상 문제는 사전에 비공개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인재를 사회적으로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지금의 청문회는 사회적으로 낭비다.

-중국의 '이웃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시각과 중국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상하이·베이징에서 비행기를 타면 2시간 안에 갈 수 없는 중국 내 도시가 많다. 이 말은 2시간 이내인 한국은 중국의 심장부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한국은 중국에 비해 시장경제 인프라가 잘돼 있지 않나. 중국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도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보건 서비스 산업만 잘해도 수요가 엄청날 것이다. 중국 14억명 인구 중에 잘사는 계층이 얼마나 많은가. 1%면 1400만명, 10%면 1억4000만명이다. 중국이 주는 '이웃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정리=ehcho@fnnews.com 조은효 예병정 기자

라가르드 IMF 총재 등 글로벌 인맥 탄탄… 고비때마다 경제외교 앞장

최근 서적과 잡지, 신문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재무부 장관). 지난 19일 서울 영동대로 무역센터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본지 창간 15

■약력 △75세 △경북 군위 △서울대 상과대학 △미 뉴욕대 교수 △한국개발원(KDI)부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재무부 장관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G20 정상회의준비위원장 △한국무역협회장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현)

4년간 최장수 경제수석 기록
G20 준비위원장 등 이력 화려
90년대 세계화 물결도 소개

인맥쌓기 비결은 끝없는 공부
상대방 도움되는 대화를 해야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재무부 장관)은 한국경제사에서 경제외교의 선봉에 선 인물로 평가된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전두환 정부 당시 초대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에 이어 4년여간 최장수 경제수석을 지내며 '안정화 시책'을 꽃피웠고, 1990년대 초반엔 빠르게 전환되는 세계화의 물결을 국내에 소개하고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가 1993년 미국에서 영어로 출간한 '세계 속의 한국경제'(Korea in the World Ec

"당시 내 눈에는 세계화의 가속화가 명확히 보이는데 정부나 기업이 빨리 이 흐름을 알았으면 했다." 1993년 세계경제연구원을 세운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는 석학들의 강연을 처음부터 언론에 공개했다. 폴 볼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전 의장은 현재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이다.

로렌스 서머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회의 의장, 파스칼 라미 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

사람(나이스 가이)인 것만으로 인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대화를 해야 한다." 그는 그 비법을 한마디로 '공부'라고 설명한다.

'국제적인 마당발'이란 평가엔 손사래를 친다. "마당발은 실력도 없이 여기저기 기웃대는 사람 아닌가. 국제사회에선 오로지 실력만으로 승부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또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겸 경제특보로

파이낸셜뉴스
The financial news

인쇄하기 취소

[대한민국 희망로드,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 (2)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정치판 지금처럼 돌아가면 잃어버린 50년 올 수 있다"

곽인찬 기자 입력 : 2015.06.22 17:43 | 수정 : 2015.06.23 14:54

국회가 제 역할 해야 2%대 성장은 충격적인 사건 추경은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
경제활성화법부터 처리해야 정치권 협조하면 5%도 성장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재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영동대로 무역센터 내 세계경제연구원에서 본지 창간 15주년을 기념, 곽인찬 논설실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경제 문제부터 국내 정치·외교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화가 이뤄졌다. 사진=박범준 기자

여전하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정이 넘친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75·전 재무부 장관) 이야기다. 일흔 중반이란 나이가 믿어지지 않는다. 무역센터에 있는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실은 책으로 꽉 찼다. "나만큼 공부하는 사람 없을 거야. 죽는 날까지 공부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덧붙인다.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88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92세에도 공부해." 하루 2~3시간은 꼬박 책이나 보고서를 읽는다고 했다. 세상 흐름을 놓치기 않기 위해서다. 그의 주장은 명쾌하다. 그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판 잃어버린 20년, 나아가 잃어버린 50년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가 보기에 일본을 저 꼴로 만든 건 고령화보다 정책실패가 더 큰 원인이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나라는 이사를 갈 수 없다"는 말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파이낸셜뉴스 창간 15주년을 맞아 지난 19일 서울 영동대로 무역센터 내 세계경제연구원에서 사공 이사장을 만났다.

대담 = 곽인찬 논설실장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하강이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5%로 내렸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처방전을 어떻게 보나.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언론이 초점을 제대로 못 맞췄다고 본다. 한은이 금리를 내렸으니 이제는 공이 정부로 넘어가 추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공은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국회로도 넘어갔다고 해야 맞다. 메르스 사태에 대응해 예산편성 등 단기적인 조치는 취해야겠지만 추경은 단기대책이 될지 몰라도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 금리인하가 효과를 내려면 국회가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투자를 일으키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

-위기 때 말고는 근래 한국 경제에 2%대 성장은 없었다. 국민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메르스 사태로 성장률이 2%대로 내려갈 것으로 생각된다. 난 2%대 성장은 갈 길이 먼 우리로선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긴 안목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해나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중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를 늘릴 법안이 얼마나 많은가. 다시 말하지만 우린 아직 갈 길이 먼 나라다. 2% 성장이 말이나 되는가. 미국같이 경제가 성숙된 나라도 4% 성장을 하고, 일본 아베노믹스의 목표도 2% 성장이다. 일부에선 고도성장은 옛날 얘기고, 이제는 한국 경제가 성숙돼 예전과 같은 성장세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미국 경제는 성숙하

지 않아서 4%대 성장을 목표로 하는가.

-이명박 정부에서 초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지금 규제개혁이 잘 되고 있나.

▲규제개혁이나 투자여건 개선은 우리가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추경은 돈이 든다.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약 3.5%로 추계되지만 마냥 이대로 있다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과 정치권의 협조만 있다면 잠재성장률을 1.5%포인트는 충분히 끌어올려 5%로 만들 수 있다. 아베노믹스는 성장잠재력 목표를 2%에 맞췄다. 현재 0.5% 수준에서 몇 년 안에 1.5%포인트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거다. 한국 경제보다 더 성숙한 일본이 한다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있나.

-최경환 부총리는 '한국판 잃어버린 20년'의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국 경제는 결국 일본을 따라가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노령화나 인구구조 변화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더 큰 원인은 정치에 있다. 정치적 리더십 부재로 인한 정책실패가 잃어버린 20년을 불렀다. 지금 국내 정치판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 역시 정책실패가 예상된다. 한국판 잃어버린 20년은 물론 잃어버린 50년도 올 수 있다.

-아베노믹스는 성공인가 실패인가.

▲아베 총리가 과연 신념을 가지고 인기 없는 개혁을 추진할 정치 지도자인가에 대해 처음엔 다소 회의적으로 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절반은 성공했다고 본다. 일본 경제는 지난 20년에 걸친 불황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바닥까지 꺼질 것 같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확 달라졌다. 일본 사람들을 만나보면 안다. 일본 경제가 잘 안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그 엔진이 작동하면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도 긍정적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기성세대는 뭘 해야 하나.

▲고용의 질이 악화됐다. 임시직이 늘고 그 자리를 청년들이 메우고 있다. 이는 교육개혁, 노동경직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독일은 사민당 슈뢰더 정권 때 '어젠다 2010'이란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핵심은 노동시장 유연화다. 현재 독일의 낮은 실업률은 올바른 교육체계와 노동개혁을 단행한 덕분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조는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경직되면 전체 노동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청년과 비노조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강성 노조는 기업투자를 막고 일자리를 외국으로 쫓아내는 부작용을 낳는다.

-노사정 대타협 방식으로 구조개혁이 될 수 있나.

▲최근 방한한 슈뢰더 총리는 "노동개혁에 성공하려면 집권세력이 정권을 잃더라도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용기와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도 노사정 타협에 실패했다. 결국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아들딸들이 일자리를 갖기 어렵고, 가져봐야 임시직밖에 갖지 못한다는 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야당은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세율을 올려야 하나.

▲정상화라니, 뭐를 정상화한다는 건가. 정상화라는 말을 쓰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지금은 기업의 입지가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시대다. 기업들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나라로 쉽게 공장을 옮긴다. 무조건 세율을 올리는 게 정상화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성찰이 이어졌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하다고 보나.

▲역사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을 선언했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완벽하지 않고,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사실 소득격차.양극화 등은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세계화의 가속화와 지식기반경제 심화라는 두 가지 큰 물결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부모가 고소득층이면 더 좋은 사교육을 받는다. 코흘리개 때부터 전부 사교육 시장으로, 외국으로 내보내질 않나. 똑같이 머리 좋은 아이라면 누가 더 유리하겠는가. 교육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득불평등은 세대를 거쳐 계속 악화될 것이다. 공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 교육개혁이야말로 지금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다.

-메르스 사태의 원인이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행정의 비능률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큰 요인 중 하나다. 사무관들이 자기 국장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 않나. 전부 길 위에 있으니…. 이래서는 정부조직이 제대로 가동될 수 없다. 횡적.종적으로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다. 사무관이 기안을 올려 과장, 국장이 고친다는 건 단어 하나, 자구 수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행간에 의미를 담아 서로의 생각을 전하는 과정이다. 사무관이 그 뜻을 잘 이해하고 자기 확신을 가지면 다른 과와 협력하고, 나아가 부처 간 협조체제도 만들어진다. 국회 전체가 세종시로 내려가든, 아니면 국회 상임위가 내려가든 뭔가 방안을 찾아야 한다.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과연 앞으로 한국에 적합한 체제인가. 개헌에 대한 생각은.

▲5년 단임제는 어중간하다. 미국과 같이 4년 중임 대통령 책임제가 좋다. 또 소선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 그래야 지역갈등을 푸는 데도 도움이 된다.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에 찬성이다.

-최근 인사청문회는 부작용이 너무 심한 것 같다.

▲인사청문회는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같은 청문회는 안 된다. 국민이 보는 앞에서 정책능력과 자질을 묻고 답하는 정책 정문회가 돼야 하는데 지금은 개인 신상을 놓고 사회적으로 난도질해서 파렴치범을 만들어 폐기처분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됐다. 개인의 신상 문제는 사전에 비공개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인재를 사회적으로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지금의 청문회는 사회적으로 낭비다.

-중국의 '이웃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시각과 중국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상하이.베이징에서 비행기를 타면 2시간 안에 갈 수 없는 중국 내 도시가 많다. 이 말은 2시간 이내인 한국은 중국의 심장부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한국은 중국에 비해 시장경제 인프라가 잘돼 있지 않나. 중국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도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보건서비스 산업만 잘해도 수요가 엄청날 것이다. 중국 14억명 인구 중에 잘사는 계층이 얼마나 많은가. 1%면 1400만명, 10%면 1억4000만명이다. 중국이 주는 '이웃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정리=ehcho@fnnews.com 조은효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